

걸치레 교육받는 '평생 군인'

군사문화 사라져야 한다

4

민방위

지난 15일 오후 2시 정각, 서울 등 수도권·중부권 일원에 제234차 민방위날 훈련 공습경보가 요란하게 울리면서 이 지역 안의 주요 간선도로는 시민들과 차량의 통행이 일시에 정지된 채 일순 정적에 휩싸였다.

"적기가 날아온다"는 등의 실황방송으로 전시를 연상케 하는 이날, 도심·교통체증구역이 아닌 일부지역 거리에서는 시내버스 승객들이 차에서 내려 인근 건물 안이나 골목으로 허겁지겁 대피했다.

훈련 유도요원들이 미처 몸을 숨길 곳을 찾지 못한 행인들을 향해 호루라기를 날카롭게 불어댔다.

다방·음식점서 잠담

하지만 서울 중구 서소문동 사무실 빌딩 각 지하층은 조용한 거리와는 달리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업무를 중단한 채 대피하러 내려온 입주회사 직원들이 다방·음식점과 복도에 뻘뻘히 들어차 지루한 듯 담배를 피우고 잡담을 나누면서 민방위훈련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 뒤 20분이 지나 해제 사이렌이 울린 뒤 이들이 우르르 몰려 각자의 사무실로 올라가거나, 거리의 통행제한이 풀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대소동'이 가라앉아 정상을 되찾는 데는 20~30여분이 더 걸렸다.

그래서인지 시민들은 이 훈련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인다.

민방위 훈련이 있는 3·6·9·12월의 15일 오후에는 시간 차질 때문에 업무나 개인약속을 되도록 피한다는 2항공사 차장 김아무개(42)씨는 "이 훈련의 초기 때는 국내외의 상황과 정부의 안보논리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런대로 의미를 느꼈으나, 요즘 들어서는 업무와 일상에 번거로움과 불편만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현대와 같이 바쁘고 치열한 산업경쟁사회에서 막연한 안보의식을 위해 국민의 활동을 일순에 40~50여분씩 제약하는 이런 단순·반복 대피훈련이 바로 국가 손실과 낭비의 요인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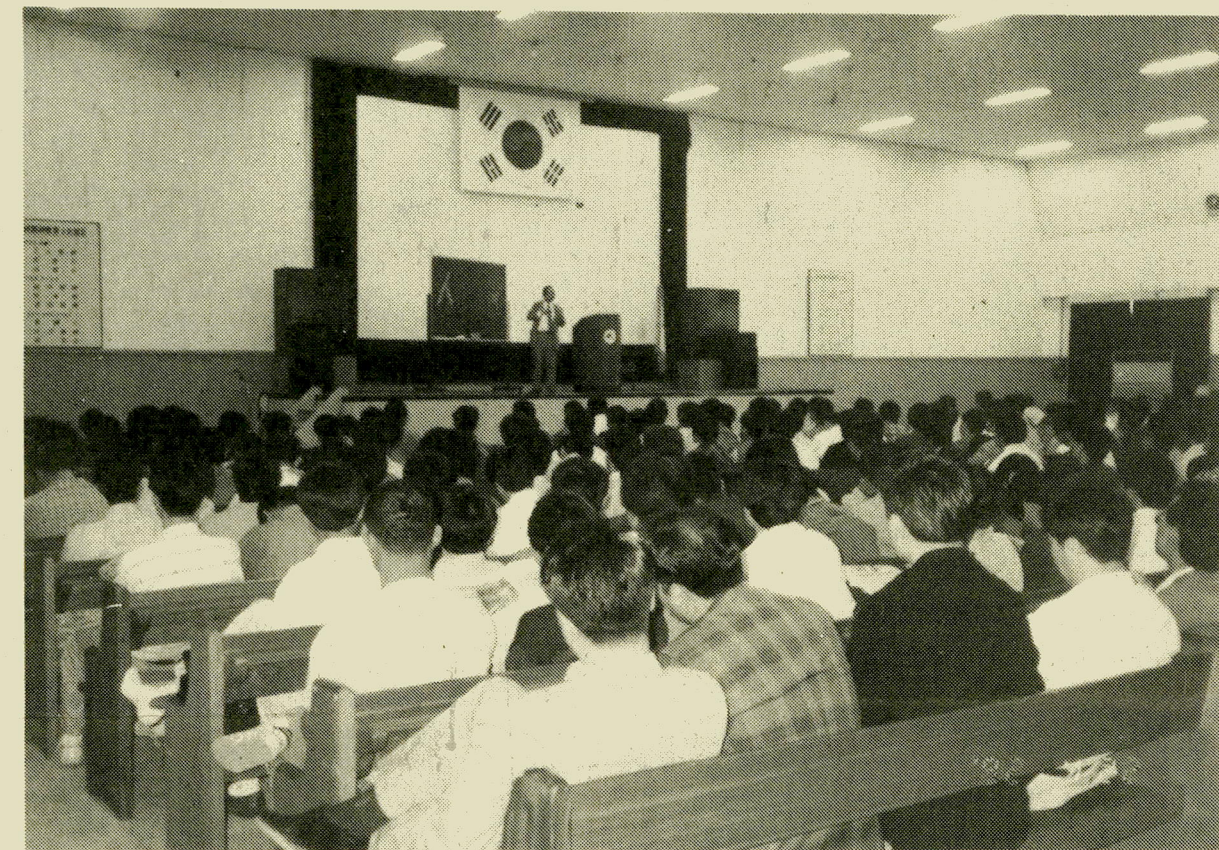
단순 반복속 거부반응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에게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것으로 비치는 민방위훈련 말고도 그 허식성뿐 아니라 생업에까지 지장을 주어 거부반응을 낳게 하는 것으로는 민방위교육도 마찬가지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현역병이나 대학생 등을 제외한 20살부터 50살까지의 남성 모두를 편성대상으로 지역·직장(통리)대로 나뉘어 비상소집·정신 및 실기훈련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은 그야말로 '평생 군인'이라는 냉소적인 하소연이 나오기도 한다. 중년에서 노인 세대로 접어드는 40~50살까지도 해마다 1·8월에 비상소집에 응해 출석점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35살 때인 79년부터 지금까지 14년째 민방위훈련을 받고 있는 김아무개(49·서울 도봉구 미아동)씨는 "군 생활 3년에다 제대한 뒤 9년동안의 예비군 과정과



민방위 훈련이 행정적 편의에서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간정부시대에 걸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편성연령 하향조정 등 시급 민방위교육 개선 미봉 그쳐

"안보논리 지양 지역사회 실생활 도움줘야"

지 합하면 성장한 이후로 26년동안 국가 안보 훈련에 참가했는데 이제까지 머리에 남는 것은 별로 없다"며 "올해는 재수생인 아들(20)과 함께 교육장에 나가야 할 판"이라고 쓸쓸해했다.

민방위날 훈련을 포함하는 민방위 교육은 베트남 공산화 직후인 75년 9월에 북한의 전면 또는 부분적인 도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던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 때부터 시작됐다.

현역군과 예비군에 뒤이어 '내 가정 내 직장'을 내가 지킨다는 슬로건 아래 사태가 발생하면 지역사회 파수꾼 역할을 자임하는 '제3의 방위조직'으로 민방위대가 창설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순수한 방위목적보다는 정치적 배경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70년대 안보논리를 앞세운 유신독재의 산물로 5·6공군 부장권이 이를 계승·담습해 민간인을 군대조직으로 수직계열화시켜 정부 홍보

등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민방위대는 창설 당시 8만4천6백62개대, 3백97만명에서 18년이 지난 현재는 10만3백67개대, 5백21만8천명으로 전 국민 남성의 약 25%가 대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방만한 5백만 조직

이 가운데 직장민방위대가 1만3천98개대 1백3만여명, 지역대가 8만6천9백90여개대 4백16만명, 시·군단위 기술지원대 2백73개대 2만여명으로 나뉘는데 방대한 조직만큼이나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조직운영면에서 편성자원이 많보니 관리능력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역대의 경우 1개 동대(동대장·동장)의 인력은 평균 1천여명인데 실무자급인 민방위담당 직원을 제외하고는 동대장인 통장의 역할은 대원에게 교육

훈련통지서를 전달하거나 비상소집 때 출석이나 부르고 대원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고작이다.

출석 부조리 시비 잦아

이 과정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여성 통대장의 적적 여부가 거론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리출석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불참자가 참석한 것으로 둔갑되는 것에 따른 부조리 시비가 자주 일어난다.

더욱이 동대장은 불참자에 대해 고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좁은 지역사회의 주민에게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출결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해 결국 '힘없고 돈없는 영세민'만이 고정적으로 참가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이다.

민방위교육이 행정적 차원에서만 고려돼 형식에 치우치는 훈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다른 이유는 부실한 교육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내무부는 민방위운영이 민주화·자율화 시대에 걸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민방위공훈련을 연 3회로 축소하고 교육내용도 전시훈련에서 재난 대비 위주로 바꿨다. 교육날짜도 대원 자신이 원하는 날을 지정해 받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 편성신고, 위반자와 교육불참자에 대해 징역·벌금·구류처분을 내리는 대신 과태료를 물게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그러나 이런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20~40살의 민방위대원들이 연 2회(1회 4시간씩)에 걸쳐 받게 되는 일반교육(정신 및 실기) 내용은 천편일률적으로 국가안보의 당위성을 강조하거나 시정홍보에 다름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수상안전 및 인명구조, 집중호우, 가스사고, 산불 등의 대처능력 등을 기르는 재난대비 훈련이나 비디오프로도 상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불평을 사고 있다.

이는 시·군·구청이 위촉한 민방위교육 강사의 부족한 능력·자질이나 시청각교재의 열악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전기·수도 보수가계를 운영하는 조아무개(37·경기도 하남시 감북동)씨는 "교육장의 강의내용이 별다른 의미가 없고 지루해 꾸벅꾸벅 졸면서도 일거리를 집에 놔둔 채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한다고 생각할 때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보충교육을 받지 않기 위해 고작 참가증이나 써내고 앉아있다 돌아가는 이런 교육은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손해 보는 일"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생산성 없고 서류에도 맞지 않는 의례적인 훈련을 되풀이함으로써 그 자체가 형식화된 지 오래인 민방위교육의 제도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면제대상 크게 늘려야"

민방위 관계자들은 우선 자원관리 부재의 1차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방만한 조직을 줄이기 위해 편성 상한연령을 현재의 50살에서 40살로 낮추거나 군·예비군·민방위 경력합산제를 실시해 일정기간이 되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생계피해가 없도록 면제대상의 폭을 과감히 넓혀야 한다는 것도 이들의 주문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남북간의 교류 확대 등에 발맞춰 안보내용보다는 말 그대로의 재난대비 등 실생활에 맞게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또 민방위라는 명칭도 재난 구급대 등으로 바뀌 지방자치단체 자율기구로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까지 내고 있다.

시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맹목적인 대북한 위기의식을 조장하는데 악용돼온 민방위 훈련 내용을 민간정부시대에 걸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하든지 아니면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영일 기자